

2021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23조 7,449억원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 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0,279,666	23,744,942	23,744,942	3,465,276	0	17.1	-	
지방세수입	20,023,706	20,023,706	20,023,706	0	0	-	-	
세의 수입	경상적	33,197	33,197	33,197	0	0	-	-
	임시적	220,733	220,733	220,733	0	0	-	-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2,030	2,030	2,030	0	0	-	-
보전 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	887,852	887,852	887,852	0	순증	-
	법정잉여금	-	2,577,424	2,577,424	2,577,424	0	순증	-

2. 세 출

- 2021년 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1,289억원으로 기정예산(3조 1,314억원) 대비 0.08%(25억 3천 5백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922,377	3,131,451	3,128,916	206,539	△2,535	7.1	△0.08	
행정 관리	소 계	839,313	839,363	836,828	△2,485	△2,535	△2.9	△3.0
	행정운영경비	803,868	803,868	803,868	-	-	-	-
	재무활동	3	3	3	-	-	-	-
	사업비	35,442	35,492	32,957	△2,485	△2,535	△7.0	△7.1
교 부 금	2,083,064	2,292,088	2,292,088	209,024	-	10.0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백만 원, %)

세부사업별	2021년도 예산						
	당초	기정	추경예산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330	3,330	795	△2,535	△2,535	△76.1	△76.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30	830	795	△35	△35	△4.2	△4.2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2,500	2,500	0	△2,500	△2,500	△100	△100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 재무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전액, 35백만원)와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의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전액, 25억원) 등 2건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0.08%인 25억 3천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총 계	3,131,451	3,128,916	△2,535	△0.08	
행정 관리	소 계	839,363	836,828	-	-
	행정운영경비	803,868	803,868	-	-
	재무활동	3	3	-	-
	사업비	35,492	32,957	△2,535	△7.6
교 부 금	2,292,088	2,292,088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기 정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330,710	795,710	△2,535,000	△76.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30,710	795,710	△35,000	△4.2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2,500,000	0	△2,500,000	△100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총계		3,131,451,205	△2,535,000	3,128,916,205	△0.08%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소계	830,000	△35,000	795,000	△4.2%
	사무관리비	35,000	-	35,000	-
	공공운영비	56,000	-	56,000	-
	국외업무여비	35,000	△35,000	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	18,000	-
	특정업무경비	70,000	-	70,000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6,000	-	616,000	-
(세무과)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소계	2,500,000	△2,500,000	0	△100%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2,500,000	△2,500,000	0	△100%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7조)에 따른 공통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 사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8억 3천만원) 대비 4.2%(3천 5백만원) 감액된 7억 9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있음.

- 재무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자원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등 해외 공무 출장 제한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 3천 5백만원(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델타 변이(dela variant)”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1년 6월 16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하였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5% 급증하였고, 8월 10일 주간 코로나19 보고서에서 “8월 5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었고, 1억명을 도달한지 6개월 만”이라고 밝히고, 델타 변이도 142개국으로 퍼졌다고 보고하였음(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Edition 52, published 10 August 2021 참조).

※ 2021년 8월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임.
51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4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11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사항 등이고, 56개국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임.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안전공지(https://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최종방문 2021년 8월 18일)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소계		830,000	△35,000	795,000	△4.2%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35,000	-	35,000	-
	공공운영비	56,000	-	56,000	-
	국외업무여비	35,000	△35,000	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	18,000	-
	특정업무경비	70,000	-	70,000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6,000	-	616,000	-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 외 업 무 여 비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35,000,000	= △35,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외출장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경정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55쪽

-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무 국외출장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고, 국가적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 국외출장에 대비하여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대시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고,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긴급성과 중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서울시 세입 사무의 자치구 위임징수에 따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25억원)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 사업 근거: 행정1부시장 방침 제526호('12.10.13)

- 본 사업은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자치구 경쟁 유발로 직원들이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의 사유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2020년도 본 사업 예산은 그동안 모든 자치구에 큰 차이 없이 나눠 주기식으로 집행되어,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시 세입 증대를 유인할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금년 예산('20회계연도까지 50억원 편성)은 50% 감액하여 예산조정(제298회 정례회) 편성된바 있음.

< 최근3년간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합 >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20년 (2019회계연도)	2019년 (2018회계연도)	2018년 (2017회계연도)
합 계	1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종 로	631,250	229,250	195,000	207,000
중 구	465,250	157,250	155,000	153,000
용 산	631,000	167,000	277,000	187,000
성 동	529,000	184,000	100,000	245,000
광 진	773,000	295,000	236,000	242,000
동대문	629,250	185,250	222,000	222,000
중 량	698,250	237,250	255,000	206,000
성 북	641,000	307,000	222,000	112,000
강 북	450,000	37,000	206,000	207,000
도 봉	617,000	120,000	275,000	222,000
노 원	335,000	160,000	0	175,000
은 평	546,250	209,250	210,000	127,000
서대문	656,000	213,000	225,000	218,000
마 포	750,000	307,000	221,000	222,000
양 천	390,000	137,000	206,000	47,000
강 서	678,250	187,250	222,000	269,000

구 분	합계	2020년 (2019회계연도)	2019년 (2018회계연도)	2018년 (2017회계연도)
구 로	367,000	220,000	100,000	47,000
금 천	390,000	137,000	35,000	218,000
영등포	627,250	129,250	252,000	246,000
동 작	930,000	307,000	322,000	301,000
관 약	795,000	242,000	272,000	281,000
서 초	481,000	190,000	122,000	169,000
강 남	559,000	163,000	142,000	254,000
송 파	710,250	222,250	287,000	201,000
강 동	720,000	257,000	241,000	222,000

- 이에 따라 재무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구 방역활동에 동원되고 있는 인력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금년)사업을 폐지*하고 사업비(‘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25억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시 세입종합평가 사업폐지 계획” 방침(세무과-3002, 2021.2.10.)

<추가정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세무과)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소계	2,500,000	△2,500,000	0	△100%
	자치구기타재원 조정비	2,500,000	△2,500,000	0	△100%

- 다만, 재무국에서는 현재까지 본 사업의 2022년도 예산(50억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기획조정실 조정 중)되고 있는바, 본 사업을 존치할 것인지, 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본 사업을 영구히 폐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재무국의 명확한 입장정리와 함께,
- 효율적인 시세 운영을 위하여 시세 전부를 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가칭 ‘지방세 조합 설립’, ‘시세징수사무소 등 설치’ 등) 마련 등 지방자치 시행 이전 부터 30년 넘게 전례답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시세 징수 사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재무국의 금년 7월말 현재 예산액(3조 1,314억원) 대비 집행률은 32.8% (1조 260억원)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서별로 보면 재무과 57.0% (4,588/8,052억원), 자산관리과 16.5%(148/898억원), 계약심사과 41.9% (47/112백만원), 세제과 7.8%(1,386/1조 7,860억원), 세무과 80.7%(4,226 /5,240억원), 38세금징수와 61.6%(44/71억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사업별 40% 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5개 부서 13개 사업으로 해당 예산액(1조 8,008억원) 대비 7.6%(1,375억원)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재정보전금'은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분이 세입처리되는 8월말 이후 자치구에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8월에 지급 완료,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인쇄(7월, 9월)에 따라 최종 10월 경 대부분 집행 예정

< 집행률 40% 미만 사업 내역 >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재무국	13개 사업 합계	1,800,783,141	137,492,241	1,663,290,900	7.6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30,710	256,037	574,673	30.8
자산관리과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7,000,000	214,621	6,785,379	3.1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업무추진	42,500	13,299	29,201	31.3
세제과	마을세무사 운영	28,000	8,000	20,000	28.6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0	1,200	0.0
	재정보전금	1,781,630,523	136,204,523	1,645,426,000	7.6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020,215	500,000	1,520,215	24.7
세무과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50,532	162,360	688,172	19.1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82,991	71,282	111,709	39.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2,700	62,119	130,581	32.2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2,500,000	-	2,500,000	0.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5,000,000	-	5,000,000	0.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503,770	-	503,770	0.0

1)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비(2,193억원 규모, 국비 545억원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 1,648억원을 분담) 분담을 위한 예산으로, 1차년도 분담금 지출을 목적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7월말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 집행 내역 >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세무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5,000,000	-	5,000,000	0.0

- ※ 재무국은 2019년 상반기까지 자체 ‘세입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세입시스템 통합 시도는 서울시의 기투자비용의 매몰비용 발생, 과세자주권 훼손,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항의방문과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으로 편승하는 것으로 입장을 급선회(행정1부시장 방침 제526호(12.10.13))하면서 금년 10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재무국 독자개발에서 행안부 시스템으로의 편입으로의 입장 급선회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의 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비 등의 규모와 분담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미비한 점 등 의회 심의권을 훼손한 점, 서울시의 추가 편입으로 인한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과 통합 구축비 등 분담금 인상 여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을 위하여 예산 요구액 100억원의 50%가 삭감되어 50억원으로 편성된 것임.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추진 : '19. 8. ~ '20. 4.
- 2단계 사업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 KLID 간 위탁협약 : '20. 5. ~ '23. 1.
- 2단계 사업 상용SW 분리발주 협의 및 구축 사업 발주 : '20. 5. ~ '20. 7.
- 입찰공고 4회(무응찰 2회, 단독입찰 부적격 유찰 1회) : '20. 9. ~ '21. 1.

- 2단계 사업자 선정 및 계약(메타넷대우정보 컨소시엄), 사업 착수 : '21. 1. 29.
 ※ 사업기간: '21. 1. 29. ~ '23. 2. 18.(장기계속계약, 1차 '21. 1. ~ '22. 1, 2차 '21. 12. ~ '23. 2.)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1차) 구축사업 추진 : '21. 1. ~ '22. 2.

- 재무국에서는 행안부 통합시스템에의 서울시의 뒤늦은 참여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간 제3차 위·수탁 협약 체결 (2021. 8.31.)에 따라 제2단계 사업 개시에 맞추어 9월에 분담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차세대 지방세입정부시스템 구축 위탁협약 체결 >

추진배경

- 전국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별 운영 중: 서울 vs 표준(16개 시도)
 - 서울(세무종합시스템 '99~), 16개 시·도(행안부 개발 표준시스템, '06~)
- 시스템 노후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 필요
 - 시스템 중복투자, 납세자 불편, 운영·관리 한계에 이른 시스템 등

추진경과

- 행안부 주관 전국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9~)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 및 16개 시·도 분담금으로 비용 총당
- 서울시에서도 전국 시스템 통합구축 참여하기로 정책결정('20.4월)
 - 서울시 2021년분 구축사업비 50억원 예산편성
- 1단계 완료('20.4.) 및 서울시 참여가 반영된 2단계 구축사업 진행 중
- ※ 구축사업비 : 총 2,193억 원 (SW 개발비, HW·상용SW 구입비, 감리비, 예비비)

(단위: 억 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계	'21	'22
합 계	2,193	545	1,648	서울시	228	151	77
지 방 세	1,767	515	1,252		179	104	75
세 외 수 입	426	30	396		49	47	2

※ 재무국은 2021년도 예산에 2021예산 요구액에서 삭감된 50억원과 기 계획된 분담금을 합하여 2022년도 예산액을 요구(178억원)하였음.

○ 재무국은 구축비 규모 및 분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조차 되어있지 않고, 나아가 2023년부터 매년 분담하게 될 운영비(5년 기준 1,708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본청) 분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서울시 시스템 : 현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서울특별시 세외수입종합 징수시스템’

○ 이처럼 재무국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납세편의 시책의 도입 등에 따라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부해온 서울시 시스템을 폐기하고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먼저 이와 유사한 과정의 재무국 사업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 2008년까지 서울시가 자체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구)서울특별시 재무회계시스템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흡수되어, 매년 분담금(연 4천만원 수준)을 부담해 오고 있는 상태로,

- 2020년 9월 결산검사위원이 시스템 일부의 필요기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설립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미조치로 아직까지 이를 구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22년까지 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분담금(395,945천원)을 부담하는 한편 향후 운영비 또한 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안전부 추진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에 대해 살펴보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지도·감독권이나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권한도 없이 매년 과도한 출연금(‘20년도 24억원) 부담만 하고 있을 뿐,

- 연구원은 과도한 잉여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과 무관한 사육을 매입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고, 출연금 대비 별다른 효과 없이 행정안전부 출신자 위주의 원장 및 임원을 임용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앞으로 시행될 ‘지방세 조합’은 지방세 징수액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행정안전부 주도로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과도한 운영비의 일방적 부담이 예견되고 있음은 물론,
 - 당초 체납징수 분야로 한정하려던 조합의 업무영역을 세무조사 및 소송 등 세정전반의 영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서울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과세자주권 침해 시도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무국은 소극적으로 방관·동조하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이미 고착화된 사례로,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이나 전문성 결여를 명분삼아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는 기관에 독점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위탁기관에 예속되어 가는 비정상적인 현실로 인한 지방자치권의 위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사정에 맞는 독립적인 행정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시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 이러한 일련의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고심의 실현인지, 아니면 조직 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수도 서울의 세입(2020회계연도 결산상 23조원)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방자치’라는 대명제를 실천해 낼 수 있는 의연한 대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 본 사업은 앞에서 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사업 이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7월말 현재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 집행 내역 >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세무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503,770	-	503,770	0.0

- 재무국은 하반기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연구용역 규모면에서 절차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내에는 계약금 지급 절차 정도만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긴급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무국에서는 집행잔액 발생 시 ‘사고이월’을 계획하고 있음.

3) 1천만원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조정 필요성

- 재무국에서 금년 예산 중 1천만원 이상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총 6개사업의 7개 통계목(7월말 현재 93.% 집행)에서 5억 4천 6백만원 상당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불용예상액 1천만원 이상 내역(통계목별) >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지출전망	불용 예상액	불용 예상률	집행 예상률
사업(통계목) 합계			27,719,310	25,773,404	93.0	27,171,473	545,730	2.0	98.0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성과상여금	23,454,413	23,203,975	98.9	23,207,292	250,438	1.1	98.9
자산 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	1,268,644	1,143,105	90.1	1,143,105	125,539	9.9	90.1
		기타부담금	130,000	-	0.0	100,000	30,000	23.1	76.9
계약 심사과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9,000	5,424	18.7	9,076	14,500	50.0	31.3
세제과	부동산공시지원	전산개발비	387,651	227,150	58.6	324,500	63,151	16.3	83.7
세무과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72,870	776,135	49.3	1,552,270	20,600	1.3	98.7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76,732	417,615	47.6	835,230	41,502	4.7	95.3

-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긴급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 재무국은 고액의 불용을 예상하고도 본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불용이 확실시 되는 위 사업 집행전망액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인력운영비(보수 등) 감액조정의 검토

- 재무국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 중, ‘보수’ 등(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포함)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보수’의 경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용·변경사용으로 감액조정하고도 25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있고,

※ 2019회계결산의 경우에도 전용·변경사용에도 242억원 불용액 발생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보수) 관련 예산 전용·변경사용 현황>

○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1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1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05,755,294	270,125		2018-11-29	505,485,169	477,302,292	28,182,877 (5.6)
	204-02 직급보조비	17,571,625		270,125		17,841,750	17,830,159	11,591 (0.1)
○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3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3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809,990	391,878		2019-03-22	519,418,112		
	303-02 성과상여금	20,614,106		391,878		21,005,984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418,112	116,000		2019-03-28	519,302,112		
	303-02 성과상여금	21,005,984		116,000		21,121,984	21,095,987	25,997 (0.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302,112	1,370,860		2019-11-25	517,931,252	488,925,367	24,252,424 (4.6)
	204-02 직급보조비	17,990,870		1,370,860		19,361,730	19,328,999	32,731 (0.1)
○ 2020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2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2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35,269,902	251,084		2020-03-23	534,658,233	509,354,714	25,303,518 (4.7)
	303-02 성과상여금	21,811,852		251,084		22,062,936	21,962,851	100,084 (0.5)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35,018,818	360,585		2020-11-19	534,658,233	509,354,714	25,303,518
	204-02 직급보조비	19,367,767		360,585		19,728,352	19,528,961	199,390 (1.0)
○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 변경1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2건								
인력운영비	보수	517,931,252	4,755,206		2019-12-16	513,176,046	488,925,367	24,252,424 (4.6)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91,455,498		4,755,206		96,210,704	95,476,749	733,955 (0.7)

※ 2021년 1월 25일에도 '보수' 14억 6백만원을 전용(감액)한바 있음.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전)	증감	예산액 (전용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 운영비 (통합편성)	인건비 (101)	보수 (101-01)	540,786	△1,406	539,380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303-02)	22,048	1,406	23,454

- '기타직보수'는 2019년도 7억 3천만원, 2020년도 26억 2천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96억 3천만원과, 15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있음.

< 인력운영비(보수) 집행전망 내역(통계목별) >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통계목)	2019년			2020년			2021회계연도(7.31.기준)			
	예산액	불용액	불용율	예산액	불용액	불용율	예산액	지출 전망액	예상 불용액	예상 불용율
재무국 합계	2,525,419	40,351	1.6	2,885,689	46,512	1.6	3,131,451	3,128,372	559	0.0
재무과 합계	743,077	37,889	5.1	786,947	44,596	5.7	805,196	804,910	254	0.0
사업소계	734,935	34,676	4.7	783,271	44,096	5.6	801,643	801,395	250	0.0
보수	513,176	24,252	4.7	534,658	25,304	4.7	539,380	539,380	0	0.0
기타직보수	96,211	734	0.8	105,069	2,624	2.5	114,737	114,737	0	0.0
무기계약근로 자보수	85,065	9,631	11.3	101,752	15,869	15.6	104,632	104,632	0	0.0
직급보조비	19,362	33	0.2	19,728	199	1.0	19,439	19,439	0	0.0
성과상여금	21,122	26	0.1	22,063	100	0.5	23,454	23,207	250	1.1

- 이처럼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 행태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자원 마련을 위한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 집행액 산정으로 재난 구호 등의 긴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